

법령Ⅱ -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

비상대비자원 관리법(시행령 포함)

- 문 1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대상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 주무부장관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61세의 의사 甲
 - ② 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류관리 기술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인 19세의 乙
 - ③ 일본의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취업준비 중인 대한민국 국민인 40세의 물리학자 丙
 - ④ 호주로부터 동물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丁

- 문 2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주무부장관이 시·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권한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 대상자원의 지정 권한
- ㄴ. 주무부장관이 직접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가 작성한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
- ㄷ. 「통합방위법」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고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 중점관리 대상물자 소유자에 대한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권한
- ㄹ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한 권한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ㄷ, ㄹ

문 3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업체에 대한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다.
- ② 「통합방위법」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어 주무부 장관이 중점관리 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자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에 동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③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가 그 물자에 부착된 지정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하여 그 효용을 훼손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④ 주무부 장관은 정부 비축 물자의 품목·규격·수량·대체 및 관리상황 등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.

문 4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주무부 장관이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점관리 대상물자의 소유자에게 물자의 수리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을 명하는 경우
- ㄴ. 주무부 장관이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점관리 대상업체로서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의 장에게 기술의 개발을 명하는 경우
- ㄷ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 비축 물자가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비축을 해제하려는 경우
- ㄹ. 주무부 장관이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게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명하는 경우
- ㅁ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 제13조제2항에 따른 업체 비축 물자가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비축을 해제하려는 경우

- ① ㄱ, ㄴ, ㄷ
- ② ㄱ, ㄴ, ㄹ
- ③ ㄴ, ㄹ, ㅁ
- ④ ㄱ, ㄷ, ㄹ, ㅁ

문 5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상 훈련과 다른 훈련 등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㉠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상 동시관리훈련
 ㉡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상 물적자원훈련
 ㉢ 인력자원 대상자에 대한 「병역법」에 따른 군사교육소집
 ㉣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훈련
 ㉤ 「예비군법」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

- ① ㉠은 ㉤보다 우선한다.
 ② ㉡은 ㉣보다 우선한다.
 ③ ㉡은 ㉤보다 우선한다.
 ④ ㉢은 ㉠보다 우선한다.

문 6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실시명령 및 훈련통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 시·도지사등은 훈련통지서를 인력 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.
 ㄴ.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업체의 임원이 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을 제때에 하지 않고 늦게 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.
 ㄷ.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 인력훈련통지서는 그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으나 물적자원훈련통지서의 교부기간은 줄일 수 없다.
 ㄹ. 동시관리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 시·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ㄴ
 ② ㄴ, ㄷ
 ③ ㄷ, ㄹ
 ④ ㄱ, ㄴ, ㄹ

문 7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훈련대상물자가 특허권인 경우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지정된 날까지 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사람에게 문서를 지참하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- ② 훈련대상물자인 동산의 소유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사람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
- ③ 동시관리훈련의 경우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.
- ④ 자가전기통신설비와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관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문 8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숙박료·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 개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,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.
- ③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유실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문 9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직계 존속의 위독으로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를 하기 어려워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,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- ㄴ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으로 훈련대상 업체가 휴업하여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,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- ㄷ.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한 경우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있다.
- ㄹ. 훈련실시대상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인력·물자 및 업체로 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ㄴ
 ② ㄴ, ㄷ
 ③ ㄷ, ㄹ
 ④ ㄱ, ㄴ, ㄹ

문 10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이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2년마다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,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문 11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상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는?

- ① 사용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의 훈련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
-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
- ③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시설을 보장하고 확장하라는 주무부장관의 준비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
-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한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의 확인·점검을 거부한 경우

문 12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무총리가 작성하는 기본지침에는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·조정할 수 있다.
- ③ 주무부장관은 업체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축한 물자의 관리실태를 확인·점검하여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④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 따른 과태료는 국무총리가 부과·징수한다.

문 13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한 물자의 노후화로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물자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.
- ㄴ. 주무부장관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.
- ㄷ.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.
- ㄹ.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·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·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, ㄹ
- ③ ㄴ, ㄷ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